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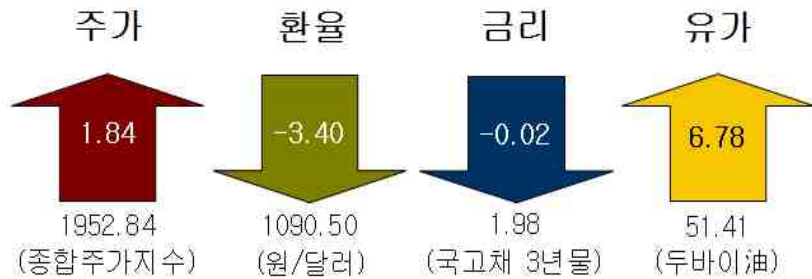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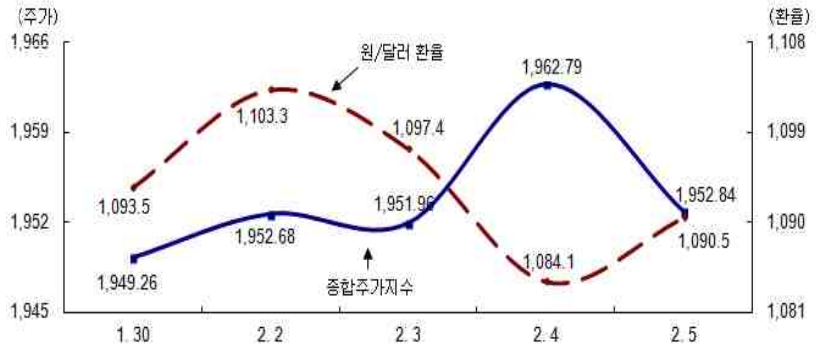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韓・日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 일본의 20년 재정절벽, 한국은 이제 시작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30~2.5)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韓·日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동 열 정책연구실장 (031-288-7950,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韓·日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일본의 20년 재정절벽, 한국은 이제 시작

■ 개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등 일본과 20년의 時差를 두고 비슷해지고 있다. 인구구조가 일본을 닮아가는 것처럼, 재정수지 적자의 고착화와 국가채무의 급증 등으로 한국의 재정구조 역시 일본을 닮아간다는 우려가 있는바, 韓日 재정구조를 비교해 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 韓日 재정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

첫째, 한국도 일본의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경제성장 하에서 세수의 절대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둘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근 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산세 세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셋째,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복지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20여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넷째, 일본은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가 43.0%로 높아진 반면 한국은 아직 15.2%로 낮은 편이지만 향후 인구구조와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GDP비중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섯째, 일본은 국민부담률(29.4%)이 1990년에 비해 0.1%p 하락하면서 재정이 악화된 반면, 한국은 국민부담률을 2012년 26.8%로 꾸준히 끌어올렸다. 그러나, 현재 증세나 국채발행 증가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누프(NOOMP)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항 목		세부 지표	日本	韓國
인구 구조		생산가능인구, 고령화	1995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보너스 시대 종료	日本과 비슷(20년 時差) (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재정 구조	세 입	①세수 증감 추이	(+)성장 → (-)세수 빈번	(+)성장 → (-)세수 발생
		②세원별 증가율	세수(재산세) 증가율 급락	급락
	세 출	③복지지출 GDP비중	급증	낮지만, 증가 추세
		④세출의 국채의존도	급증	아직 낮음
	지속 가능성	⑤재정적자 GDP비중, 국가채무 GDP비중	급증 급증	낮지만, 증가 추세 낮지만, 증가 추세
		⑥국민(조세)부담률	국민(조세)부담률 하락	일본 수준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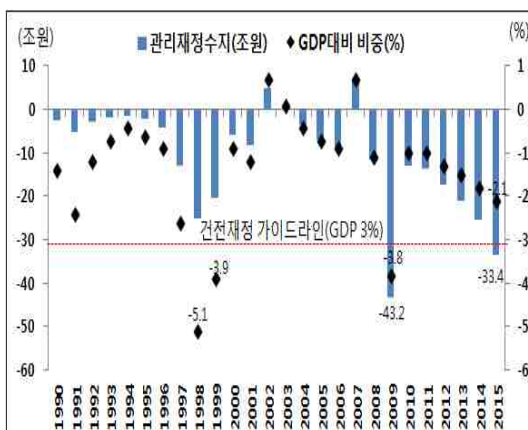
■ 시사점

첫째,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다. 국내의 경기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재정 준칙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재정적자 -2% 이내, 국가채무 40% 이내'처럼 보다 강화된 재정건전성 목표가 필요하다. 셋째, 세입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체질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고용률 제고, 소득 증가율 제고, 합계출산율 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개요

- (재정건전성 우려) 2015년에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15년에 예상되는 33.4조원의 재정적자는 2009년의 43.2조원의 적자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외환위기 직후(1998년, 24.9조원)보다 큼
 - 재정적자의 GDP 비중이 'EU의 건전재정 가이드라인'(GDP 3%)¹⁾ 이내에 있으나, 2010년 1.0%에서 2015년 2.1%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우려됨
 -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6회의 회계연도 가운데 24회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적자(명목GDP대비 -3.8%)를 기록한 후 적자폭이 일시 감소했다가 2012년부터 다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기준 국가채무는 569.9조원으로, GDP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 부채 등 '잠재 위협요인'에 유의해야 함
 - 명목GDP는 1997부터 2015년까지 3.2배(年 6.6%)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에 60.3조원에서 569.9조원으로 9.5배(年13.3%) 급증함
 - 국가채무의 GDP비중이 'EU의 건전재정 가이드라인'(GDP 60%)내에 있지만, 그 비중이 2015년 35.7%로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도 급증²⁾한 점에 유의

<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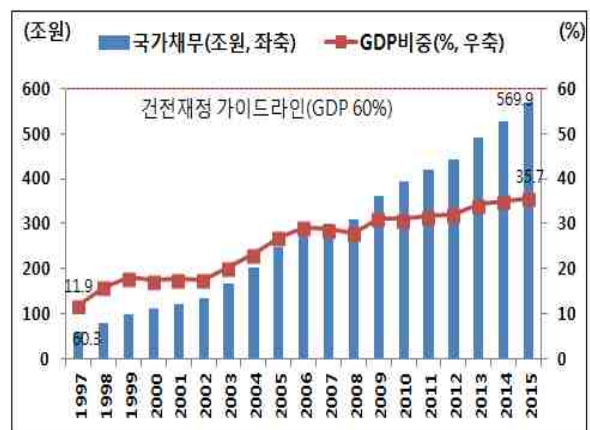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주1 :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수지.

주2 : 2013년까지 실적치, 2014년부터 전망치.

< 한국의 국가채무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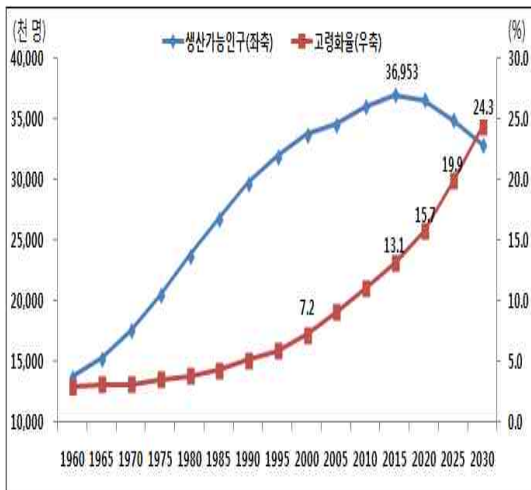
주 : 국가채무 통계는 1997년부터 제공됨.

- 1) EU회원국 가입조건으로 재정적자는 GDP의 3%이내,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고함.
- 2) 최준욱(2014)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총 343조 5000억 원(GDP의 27%)에 달하며, 국회 이한구 의원은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하면 GDP의 50%이상이라고 주장.

○ (인구구조 유사化) 日本은 1995년 이후, 韓國은 2015년 이후 '인구보너스' 시대가 종료³⁾되면서, 양국의 인구구조가 닮아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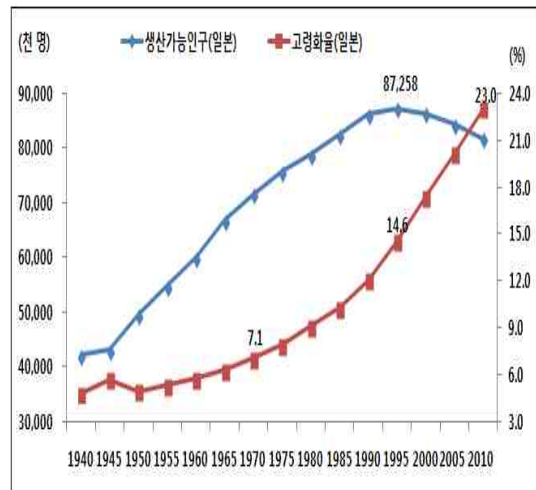
- 日本이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에 시달린 바 있는데, 우리도 20여년 지난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 우리가 20년의 時差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와 비슷해지고 있어서, 재정구조 역시 일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한국 인구구조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생산가능인구= 15~64세 인구.

< 일본 인구구조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 (재정구조도 유사化(?)) 재정수지 적자의 고착화, 국가채무의 급증 등으로 한국의 재정이 일본과 비슷해진다는 우려가 있는바, 韓日 재정구조를 비교해 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함

-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긴 시점(한국 1995년, 일본 1981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재정구조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 시사점 등을 도출

< 재정구조 비교의 틀 >

항 목	세부 지표
세 입	①세수 증감 추이, ②세원별 증가율
세 출	③복지지출의 GDP비중, ④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
지속가능성	⑤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GDP비중, ⑥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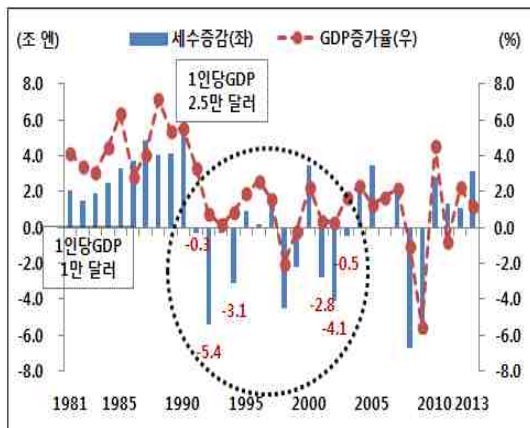
3) 藻谷浩介는 『デフレの正體 - 經濟は「人口の波」で動く』(2010)에서 신규대졸이 정년퇴직보다 많은 경우 '인구보너스'시대라고, 정년퇴직이 신규대졸보다 많은 경우 '인구오너스'시대라고 정의함.

2. 韓日 재정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4)

① (세입1) 日本의 90년대와 마찬가지로, 韓國의 경우도 플러스 경제성장 하에서 세수 절대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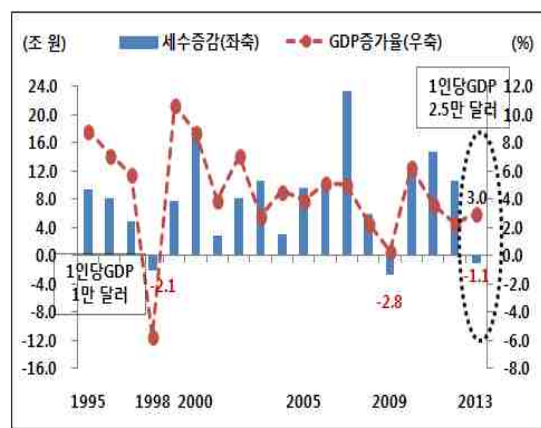
- 세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한 첫 해가 2012년이며 그 후 계속해서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 세수 계획 대비 실적5) (조 원): ('11) +4.8 → ('12) -2.8 → ('13) -8.5 → ('14) -11.1 → ('15) -3.4
- 우리는 세수 절대액의 감소가 세 번 있었는데 1998년은 IMF외환위기,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었지만, 2013년의 세수 감소는 예상 밖이었음
- 1998년 세수는 67.8조원으로 1997년의 69.9조원에 비해 2.1조원 감소
- 2009년 세수는 164.5조원으로 2008년의 167.3조원에 비해 2.8조원 감소
- 2013년에는 큰 경제위기가 없었고 성장률이 플러스(2012년 2.3%, 2013년 3.0%)였는데도 1.1조원의 세수 감소6) (* 2012년 203.0조원 → 2013년 201.9조원)
- 日本은 1990년의 60.1조 엔을 정점으로 세수가 감소 추세에 있음
- 日本은 1990년(60.1조 엔) 이후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잃어버린 20년'의 경기침체로 조세수입이 감소해 왔으며, 2013년 조세수입은 47조 엔에 불과

<日本의 조세수입과 GDP 증감>



자료 : 일본 재무성, IMF.
주 : 일반회계 조세수입으로 稅外수입 등 제외.

<韓國의 조세수입과 GDP 증감>



자료 : 기획재정부, IMF.
주 : 세수에는 稅外수입 등 제외.

4) 韓日 재정 구조를 세입, 세출, 지속가능성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5) 2014년부터는 추정치(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이며, 낙관적 세수 예측과 내수 부진에 기인함.
6) 2013년 성장률이 3.0%로 플러스였음에도 세수 절대액이 감소(-1.1조원)한 원인으로는 (1)물가상승률이 1%대로 급락한 점, (2)MB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가 감소한 점, (3)글로벌 재정위기로 기업들의 2012년 실적이 좋지 못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MB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62.4조원(국회예산정책처, 2009~2013년)부터 25.4조원(기획재정부, 2008~2013년)까지로 추정되고 있음.

② (세입2) 日本과 마찬가지로 韓國의 경우도 최근 재정수입 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산세 세수의 감소가 두드러짐

- 재정수입은 경제성장률에 크게 좌우되는데,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 따라 재정수입의 증가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되는 투자(총자본형성) 부진과 총요소생산성 하락 등에 따라 1990년대 초(외환위기 이전) 7.4%에서 최근 3.5%로 급락
 - 재정수입의 증가율은 2000년대 연평균 8.8%에서 최근에는 연평균 5.8%로 3.0%p 하락했으며, 조세수입 증가율도 같은 기간 8.1%에서 5.2%로 크게 하락하여 세수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명목GDP의 변화에 따른 총수입의 변화를 보여주는 '재정 탄성치'도 1990년대 1.151p에서 최근에는 1.052p로 하락했고, '조세수입 탄성치'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0.980p에서 0.949p로 하락함
- 재정수입의 항목별 증가율과 탄성치를 비교해보면, 지난 25년여 동안 '조세수입' 보다는 '사회보험료'의 하락이 더 컸으며, '조세수입' 중에서는 '재산세'의 증가율과 탄성치 하락이 두드러짐
 - 재산세의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2000년대 8.2%에서 최근에는 4.6%로 급락하였는데, 2008년 이후의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이 큼
 - 소비세 증가율도 같은 기간 6.6%에서 5.2%로 하락했는데, 이는 최근의 내수 부진을 반영하고 있음

<日本의 세원별 증가율 추이>

	연평균 증가율 (%)				
	1981~89	1990~99	2000~09	2010~13	전체 기간
총수입	6.8	0.6	-0.3	3.0	2.3
-조세수입	7.1	-0.5	-1.1	1.9	1.7
· 소득세	7.8	-3.6	-1.1	3.5	1.0
· 재산세	8.8	1.6	-1.3	-0.7	2.5
· 소비세	3.8	5.9	-1.0	0.7	2.7
-사회보험료	6.1	3.1	1.0	3.6	3.4

<韓國의 세원별 증가율 추이>

	연평균 증가율 (%)			
	1995~99	2000~09	2010~13	전체 기간
총수입	8.2	8.8	5.8	8.5
-조세수입	5.9	8.1	5.2	7.3
· 소득세	2.5	10.7	7.1	8.2
· 재산세	15.1	8.2	4.6	9.7
· 소비세	7.9	6.6	5.2	7.0
-사회보험료	17.2	10.9	8.0	12.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기재부, OECD 자료 토대로 재계산).

주1 : 한국의 총수입 항목 중 '자본수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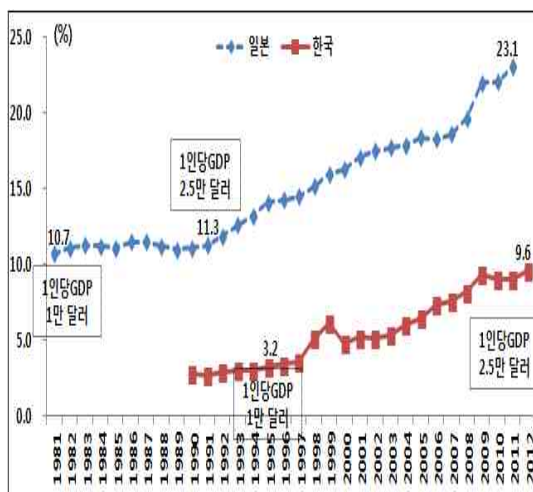
주2 : 일본의 총수입, 사회보험료는 2011년까지만 자료가 제공됨.

주3 : 일본의 '소비세'에는 관세가 포함됨.

③ (세출1) 日本과 마찬가지로 韓國도 복지지출의 GDP 및 총세수 대비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20여년의 시차(時差)를 두고 日本을 따라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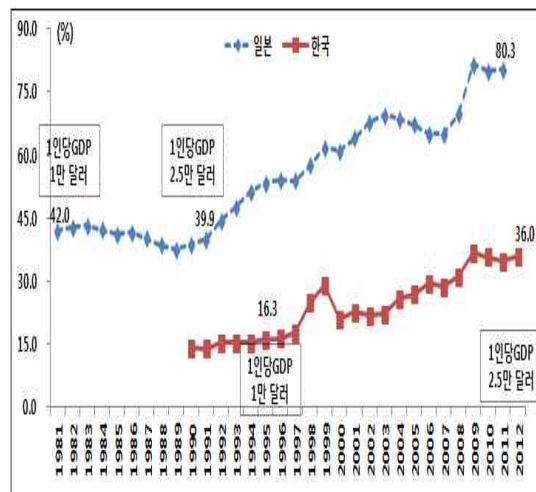
-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日本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9.6%에 불과하여 日本의 1981년 수준 10.7%에도 못 미치고 있지만, 1995년(3.2%)에 비하면 3배가량 높아지는 등 증가 속도가 빠름
 - 日本의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10.7%에서 2011년 23.1%로 2배 이상 급증함
-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日本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36.0%에 불과하여 日本의 1981년 수준 42.0%에도 못 미치지만, 1995년(16.3%)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지는 등 증가 속도가 빠름
 - 日本의 복지지출이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42.0%에서 2011년 80.3%로 2배가량 급증함
- 2015년도의 복지(보건·복지·고용)지출은 115.7조원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8.5%로서, 전체 정부지출 증가율(5.7%)을 크게 상회함
 - 복지(보건·복지·고용)지출의 5년 평균 증가율은 年7.3%(2010년 81.2조원→2015년 115.5조원)로서, 총지출 증가율(年5.1%)을 크게 상회
 - 복지지출의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에 27.7%에서 30.8%로 상승

<복지지출의 GDP비중 韓日비교>



자료: OECD.
주: 공공복지지출의 GDP대비 비중.

<복지지출의 총세수비중 韓日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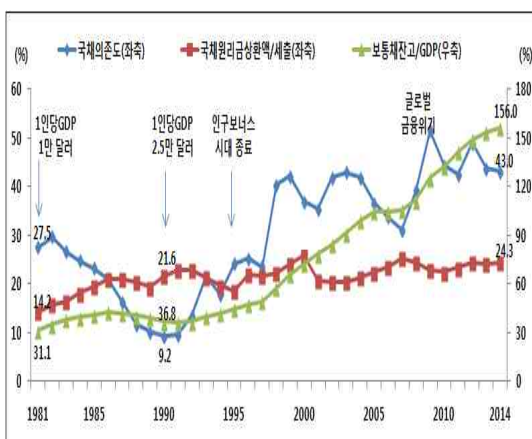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OECD 자료 토대로 재계산).
주: 공공복지지출의 총세수 대비 비중

7) 2012년 기준. OECD 국가별 비교 자료는 2012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④ (세출2) 日本은 2014년 세출예산의 43.0%를 국채발행에 의존하고, 국채원리금 상환액이 세출예산의 24.3%에 이를 정도로 예산의 경직성이 크지만, 韓國의 국채발행 의존도 2014년 15.2%로서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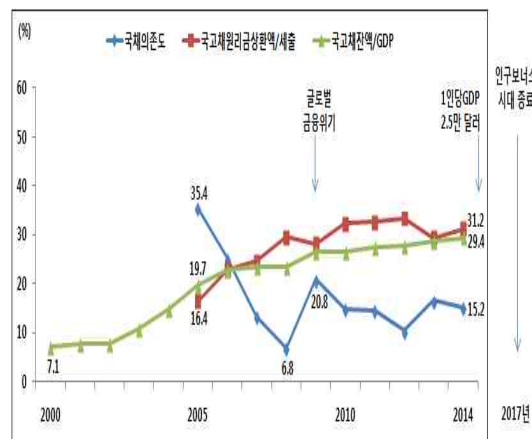
- 日本의 국채의존도(보통채발행/일반회계세출)는 1990년 9.2%까지 낮아졌으나, 그 이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2014년 43.0%까지 급속히 높아짐
 - 1990년대의 경기부진, 고령화 진전, 조세부담률 하락 등의 여건 하에서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린 결과 ‘국채의존도’가 급속히 상승함
 - 따라서, 日本의 국채원리금 상환비용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81년 14.2%에서 2014년 24.3%로 상승했고, 보통채(4條채+특례채)잔고의 GDP비중도 1981년 31.1%에서 2014년 156.0%로 5배 이상 크게 상승함
 - 그러나, 엔화는 경화(硬貨, hard currency)이고, 일본 국채의 6.8%만 해외투자자들이 보유⁸⁾하고 있어서, 일본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는 크지 않음
- 韓國은 2014년 현재 ‘국채의존도’[(국고채 발행액-국고채 상환액)/일반회계세출]가 15.2%로서 일본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국고채 잔액의 GDP비중은 2000년 7.1%에서 2014년 29.4%로 14년 동안에 4배 이상 증가함
 - 우리의 경우에도 2017년 인구보너스 시대가 종료되고 복지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향후 국고채 발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日本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 추이>



자료: 日本財務省 理財局, ‘債務管理レポート2014’.
 주: 국채의존도=보통채/일반회계세출
 주2: 보통채는 ‘4條채+특례채’로 차환채 등은 제외.
 주3: ‘국채의존도’, ‘원리금상환액의 韓日간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

<韓國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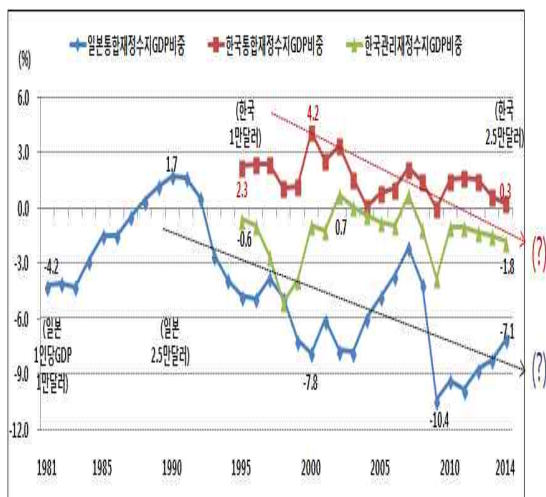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현대경제연구원.
 주: 국채의존도=(국고채 발행/상환)/세출
 주2: 세출=일반회계 세출.
 주3: 세출=일반회계 세출.

8)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중(‘08년)은 일본 6.8%, 한국 8.4%, 프랑스 33.8%, 영국 36.5%, 미국 50.3%, 독일 52.6%.

⑤ (지속가능성1)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GDP비중은 韓國이 日本에 비해 훨씬 건전하고 '국제기준'도 충족시키고 있으나, 향후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안심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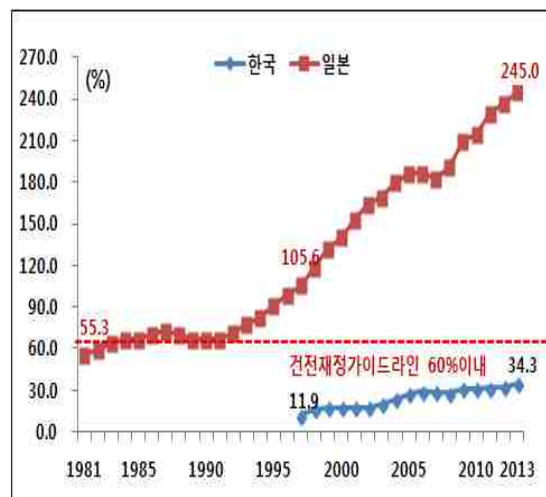
-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의 GDP비중은 -1.8%, 국가채무의 GDP비중은 34.3%로서 EU의 '건전재정 가이드라인'(각각 -3%이내, 60%이내)⁹⁾을 넘지 않았고, 日本에 비해서도 양호한 편이지만, 최근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유의해야 함
 - 외환위기 당시 1998년 -5.1%,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8%의 큰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1.8%로서 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국가채무의 GDP비중은 1997년 11.9%에서 2013년 34.3%로 16년만에 3배가량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日本은 통합재정수지의 GDP비중이 -7.1%, 국가채무의 GDP비중이 245%에 달해 '건전재정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났고, 일본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음
 - 고이즈미 前수상의 재정개혁 드라이브에 따라 2003~2007년까지 -7.8%에서 -2.1%로 재정적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 아베 수상의 집권 등으로 '재정긴축과 재정개혁' 기조는 무위로 돌아감
 - 국가채무 비중도 1997년 100%를 넘는 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245%에 달함

<재정수지의 GDP비중 韓日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日本 財務省.
주 : 관리재정수지 기준.

<국가채무의 GDP비중 韓日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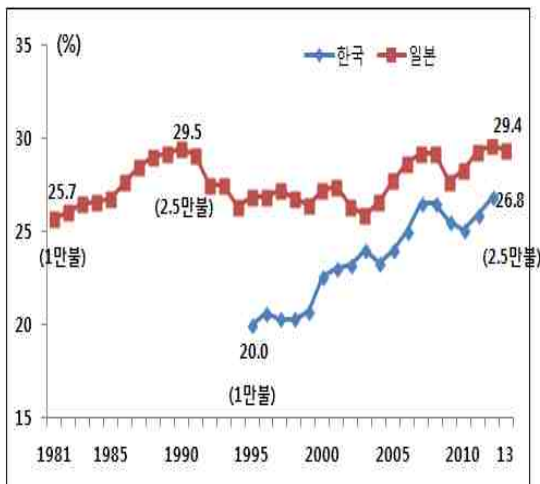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IMF.
주 : 일본은 IMF 데이터, 한국은 통계청 데이터.

9)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처음 제정된 건전재정 가이드라인은 '재정적자의 경우 GDP의 3% 이내', '국가채무의 경우 GDP의 6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현재는 EU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강화되어 있음.

⑥ (지속가능성2) 日本은 국민부담률이 1990년 29.5%에서 2013년 29.4%로 23년간 0.1%p 감소한 반면 韓國은 20.0%에서 26.8%로 꾸준히 올랐으나, 향후 '국채발행(재정 악화)'이나 '증세(재정 건전화)'나의 선택에 직면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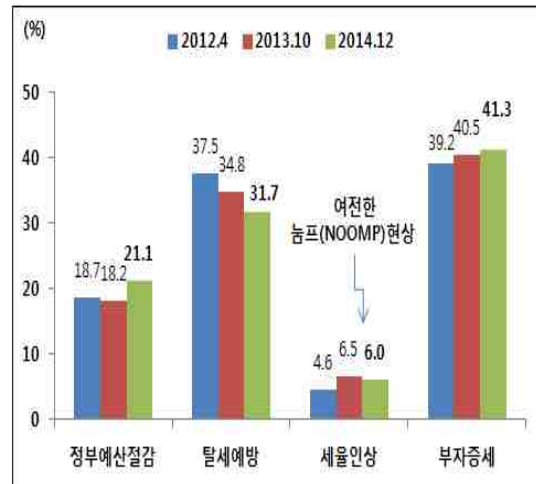
- 日本은 1990년(29.5%)부터 2003년(25.9%)까지 국민부담률이 감소했다가 반등했으나, 2013년 현재 29.4%로서 23년 전에 비해 0.1%p 감소함
 - 日本의 낮은 국민부담률(29.4%)은 OECD 평균(34%)에 못 미치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기여함. 또한, 사회보장 기여분을 제외한 '조세부담률'은 지난 20여년간 더 크게 감소함(※ 1990년 21.0% →2011년 16.8%)
 - 韓國은 2012년 현재 국민부담률이 26.8%로서 OECD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향후 급증할 복지 수요에 일본처럼 국채 발행과 재정 악화로 대응할 것인지, 증세를 통한 재정 건전화로 대응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
- 韓國의 경우 '내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하고 싶다'는 늑프(NOOMP, not out of my pocket)¹⁰⁾ 의식이 강하므로, '행정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조세 저항을 줄여가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2012년, 2013년, 2014년 3회에 걸쳐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물어본 결과, '세율 인상'의 응답률은 각각 4.6%, 6.5%, 6.0%에 불과했음

< 국민부담률 韓日비교 >



자료 : OECD (2014).
 주1 :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험료)/GDP.
 주2 : 조세부담률=세금/GDP.

<복지강화 위한 재원조달 방안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3회 조사(2012.4, 2013.10, 2014.12)결과.

10) 올해 실시된 '담뱃세 인상'을 두고 한편에서는 '서민증세'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일반 국민들은 '증세의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3. 시사점

- 국내외 경기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매진해야 하며,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임
 - 국내외 경기가 어렵고 경제의 체력이 떨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증세'라는 큰 수술을 하기는 쉽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함
 -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추진해야 하며, 실질성장률이 다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온 이후에 즉 경제의 체력이 보장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의무지출과 적자성 채무의 비율도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바, 엄격한 재정 규율이 요구됨
 -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
 -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가입조건의 하나인 '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60% 이내'를 참고하여 '재정적자 -2% 이내, 국가채무 40% 이내'와 같이 보다 엄격한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정규율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PAYGO' 원칙¹¹⁾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법안·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재원대책을 요구함
- 단기적으로는 세입 구조의 개혁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하며, 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 세원의 투명성 강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구조 개혁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11) 'Pay-as-you-go'의 약자로서 미국에서 1993~2002년 시행됐던 재정규율의 일종. 의회에서 재정지출이나 감세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추진한 바 있음.

- 아울러, '증세에 대한 높은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행정의 투명성 제고, 정부 신뢰도 제고 등의 대책도 추진
-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중복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호주의 '센터링크'¹²⁾는 복잡다기했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센터링크')하는 작업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짐
-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 소득증가율 제고 등 재정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디플레 예방과 내수 활성화, 고용률 제고, 소득 증가율 제고, 출산율 제고 등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과 재정 악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노령(old age) 사회복지지출액이 급증하고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점차 OECD평균(21.7%, 2013년)에 근접할 것임
 - ※복지지출비중 장기 추계: 2020년 12.9%→ 2040년 22.6%→ 2060년 29.0%¹³⁾
 - 연금 등 '노령' 관련 사회복지지출액이 1990년 1.5조 원에서 2012년 47.2조원으로 급증했으며, GDP비중도 1990년 0.8%에서 2012년 3.7%로 크게 증가
 -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를 다른 OECD 선진국과 비교¹⁴⁾해본다면, 개인소득세와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사회보장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참고하여, 향후 세제 개편에 임해야 함

경제연구본부 정책연구실장 김동열 (031-288-7950, dykim@hri.co.kr)

12) 호주 센터링크(<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dhs/centrelink>).

13)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2014년1월28일.

14) 하능식 외,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9	2.7	1.8	4.5	3.5	2.2	-2.1	4.6	5.0	-	3.1
유로 지역	-0.4	-0.2	0.3	0.1	0.3	0.8	0.3	0.1	0.2	-	1.3
일본	1.7	1.5	0.7	0.4	-0.4	0.9	1.4	-1.7	-0.5	-	0.8
중국	7.7	7.7	7.5	7.8	7.7	7.4	7.4	7.5	7.3	-	7.1

주 : 1) 2014년과 15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과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6월말	12월말	1월 29일	2월 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03	2.53	2.22	1.75	1.82	0.07 %p
	엔/달러	105.04	101.44	119.46	117.45	117.26	-0.19 ¥
	달러/유로	1.3799	1.3645	1.2159	1.1280	1.1332	0.0052 \$
	다우존스지수(p)	16,577	16,827	17,823	17,417	17,885	468 p
	닛케이지수(p)	16,291	15,162	17,451	17,769	17,695	-74 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6	2.68	2.10	2.00	1.98	-0.023 %p
	원/달러(원)	1,055.4	1,011.8	1,099.3	1,093.9	1,090.5	-3.4 원
	코스피지수(p)	2,011.3	2,002.2	1,915.6	1,951.0	1,952.8	1.8 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6월말	12월말	1월 29일	2월 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8.55	105.37	53.27	44.53	50.48	5.95 \$
	Dubai	107.88	109.29	53.60	44.63	51.41	6.78 \$
CRB선물지수	280.17	308.94	234.05	213.17	227.73	14.56 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